

광주시·전남도, 현안 국정과제 채택·국비 확보 ‘시동’

姜시장·국회의원, 국정과제 대응 간담회
AX 실증밸리 등 12건·추경 5건도 논의
금지사, 보고회 주재...104건 과제 발굴
8월까지 국정기획초·중앙부처 건의활동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채택 및 정부 2차 추경 국비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과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지역 7대 핵심 공약과 자치구별 5대 공약, 우리동네 32개 공약 등을 공유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28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및 제2차 정부 추경을 앞두고 광주시 주요 국비 사업 12건과 정부 추경 반영이 필요한 사업 5건에 대한 국회 지원도



광주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강기정 시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광주시 제공>

요청했다.

주요 국비 사업은 ▲AX 실증밸리 조성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예타 면제 신속 추진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C) 확장 전역 국비 지원 ▲국가 주도 5·18 역사 클러스터 조성 등 광주시 핵심 현안 및 대선공약에 반영된 과제 등이다.

추경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역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 지원, 광주 공공배달앱 운영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 추경에 대한 논의를 비

롯해 지역 대표 공약을 어떻게 국정과제로 관철시킬 것인지, 시와 국회가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광주 발전의 핵심은 광주시와 국회의 협력에 있다. 광주가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날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열어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등 도정 핵심 현안과 제도 개선 등 건의과제 반영을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전남 미래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전남도는 대선 기간 중 집중 건의한 전남 미래 발전 핵심과제·도정 현안 중 국정과제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 정책 공약, 광역 공약, 시·군 공약 중 핵심 현안과 연계된 과제, 공약집에는 없지만 국정과제에 반영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등 총 104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발굴 과제는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AI 첨단 농업 융복합 지구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전남

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이다.

전남도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 중 최종 건의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는 오는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건의활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미래 발전을 견인하도록 새 정부의 운영 방향에 적극 협력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핵심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정책 방향에 맞는 논리 개발과 전략적 건의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내란·채상병·김건희’ 3대 특검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후 ‘특검 정국’ 본격화

민주 ‘내란 수사는 정치보복 아냐’

‘검사징계법·법무부직제’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 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경우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김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경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굳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과 관련,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 내겠다”며 “어제의 범죄를 발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하고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을 통한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내란을

일으켜 놓고 내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반하장 중의 적반하장”이라며 “내란을 부정하는 듯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 공사를 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감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김진수 기자

‘전남 방문의 달’ 5월 역대 최다 788만명 찾았다

‘전남관광플랫폼’ 5천명 신규 가입

특화여행상품 매출도 21억원 기록

전남도가 여행업계 위기 극복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5월! 전남 방문의 달’ 한 달 동안 전남을 찾은 방문객은 총 788만명으로 역대 5월 관광객 중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방문의 달’ 시행 직전인 지난 4월(601만명)보다 187만명(30%), 지난해 5월(730만명)보다 58만명(8%) 늘어난 규모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공식 기록으로 집계된 지난 5월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도 520만대로 전월보다 110만대(27%)나 많았다.

5월 전남에서 열린 19개 축제 방문객은 2024년보다 25만명(20%) 늘어난 159만명으로 집계됐다.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79만명), 해남 우항리공룡박물관(15만2천명), 함평 엑스포공원(17만명), 담양 죽녹원(12만4천명), 목포 해상케이블카(9만6천명) 등 주요 관광지 상당수

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이는 전남도가 ‘방문의 달’을 맞아 준비한 숙박·위케이션 빈값 할인, 특화 여행상품 운영, 관광지·체험시설 시·군 연계 할인 등 파격적 프로모션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의 5월 신규 가입자는 5천500명, 월매출은 2억9천700만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23배, 5.2배 수준으로 대폭 늘었다.

특화 여행상품을 운영한 30개 여행사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2만900명을 모집해 5월 한 달 동안 2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김재정 기자

李대통령, 장·차관 ‘국민추천’ 받는다

국민추천정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추천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추천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Y프로젝트, 행정사무조사 추진해야”

박희율 시의원 ‘행정절차 투명성 점검’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3·4선거구)은 10일 신활력추진본부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Y프로젝트(영산강 익사이팅 존) 공모 특혜 의혹과 관련,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집행부는 사안을 단순 행정 착오로 축소하고 있다”며 “416억원에 이르는 대형 공약사업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고서 수정에 관련한 관계자들이 ‘캐드 프로그램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반면, 시장은 ‘단순한 표기 문제였

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실무자와 책임자의 발언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행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특혜, 위법, 밀실 행정 의혹이 있는 이상 특정 사업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며 ‘Y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침묵하면 시정 견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기에 시민 신뢰를 회복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타 사업에서도 유사한 절차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동료 의원들과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 해수욕장 내달 5일 첫 개장

전남지역 해수욕장이 7월5일 여수·함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전남도는 10일 올해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사계절 관광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올해 운영계획과 이용 활성화 방안,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협의회에는 해수욕장이 있는 12개 시·군, 소방본부, 목포·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등 해수욕장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 명소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5% 많은 66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장은 54개소에서 7월5일부터 8월24일까지 51일간 이뤄진다. 7월 첫째 주 여수·함평을 시작으로 둘째 주 목포·고흥·보성·장흥·완도 신지명사리, 셋째 주 해남·무안·영광 송이도·진도·신안, 넷째 주 영광 송이도·완도가 순차 개장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